

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차승일

1월 25일 총선에서 그리스 노동자 등 서민들은 긴축과 내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그리스 경제가 거덜나서 마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될 것이라는 지배계급과 주류 언론의 협박이 이번에는 거의 통하지 않았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36퍼센트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시리자는 전체 3백 석 중 1백49석을 차지했다.

직전 연립정부를 이끌었던 중도우파 신민당은 27.8퍼센트를 득표했다. 2012년에 견줘 1.85퍼센트포인트(약 10만 7천 표) 줄었다. 중도좌파 사회당은 겨우 4.68퍼센트밖에 얻지 못했다. 이로써 1974년 군부독재 타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민당과 사회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하게 됐다.

시리자의 승리 소식에 고무된 한 해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시리자의 승리는 그리스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긴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힘을 주는 소식이다.



2014년 11월 그리스 총파업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시리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시리자의 승리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으로 대중의 삶이 파멸해졌다. 위기가 시작된 이래 1백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그리스 인구가 1천1백만 명이 좀 못 되는 규모임을 감안하라), 월평균 임금은 20퍼센트가량 줄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는 ‘구제’ 금융 2천4백억 유로(약 2백93조 원)를 제공하면서 혹독한 긴축 정책을 조건으로 붙였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깎고 연금을 줄이고,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했다. 2008~13년 기초 생필품도 없는 사람들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구제’ 금융의 90퍼센트는 곧바로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과 투기적 금융기관들로 갔다. 그리스 서민층은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한 “빚”을 갚느라고 허리가 휘었다. 시리자 대표이자 그리스의 새 총리가 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

축 정책을 “재정적 물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 상황은 극우·인종차별 운동의 성장을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리자의 승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노동자 계급 투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시리자 승리의 둘째 요인이다.

시리자를 등장케 한 대중운동 분출의 시작은 2008년 12월 경찰의 청소

년 살해에 항의해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 뒤 광장 점거 운동과 학생운동 등이 일어났다. 특히 총파업이 32차례나 일어났다. 그보다 작은 규모의 파업은 셀 수도 없다. 그 결과 정부가 4년 새 네 번이나 붕괴됐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해 일어난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대중투쟁에 의한 급진화 속에서 2009년 4.6퍼센트였던 시리자의 지지율은 2012년 6월 26.89퍼센트로 치솟았다.

그리스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시리자는, 긴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독립당과 연정을 맺었다.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무원칙한 합의였다. 시리자와 그리스독립당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 이는 시리자의 한 의원도 시인한 바이다. “사회적 정점, 외교 정책, 시민권 등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스독립당은 2012년 신민당에서 오른쪽으로 분열해 나온 파노스 카메노스가 만든 정당이다. 그리스독립당은 당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민중주의 정당이다.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문화주의에 반대한다. 당대표 카메노스는 동성애 혐오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고, 인종차별적 언사를 핏대 세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리자가 그리스독립당과 연정을 하는 이유가 단지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만은 아니다. 시리자 지도부는 전부터 긴축 반대론자라면 우파와도 협력하려 해 왔다. “국가”를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정부를 “국익(국가 이익)”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는 시리자의 핵심 사상을 반영한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 간 투쟁을 호도하는 태도다.

그리스독립당과의 연립 같은 무원칙한 행보는 곧 시리자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 2면으로 이어짐

시리자 정부의 앞날은?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치프라스는 “긴축의 악순환”을 끝낼 것이라고 연설했다. 시리자의 승리로 양해각서는 “무효”가 됐다고도 했다. 양해각서는 그리스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며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시리자는 긴축과 양해각서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치프라스는 1월 28일 열린 첫 내각 회의에서 트로이카와 채무 조정 재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로이카는 어쩌면 이 요구를 묵살해 버리기보다는, 2월 말로 예정된 긴축 정책 제철 시한을 연장해 주며 재협상에 나서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채무 상환 만기 연장이나 금리 할인 등의 방식으로 그리스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 대가로 트로이카는 “책임” 있고 “분별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요구할 것이다. 즉, 시리자 정부 스스로 긴축

안을 제출하도록 순치시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첫 내각 회의 이후 그리스 증시가 폭락하고 국제 금리가 올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 개혁에 한정하는 시리자에 이런 불안한 경제 전망은 우경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시리자는 불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치프라스는 선거 결과 발표 뒤에 한 연설에서 “좌파”라는 말

을 한 마디도 안 했고, 심지어 “시리자”라는 말도 안 했다. 그보다는 “국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시리자의 주요 의원 한 명은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고 군 장성들을 달랬다. 시리자에게는 국방비 감축 계획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계획도 없다.

게다가 인종차별적 우파 민중주의 정당인 그리스독립당과 연정을 맺기로 했다.

▶ 1면에서 이어짐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시리자 정부는 왼쪽으로부터, 또 아래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다. 시리자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그리스 국영방송(ERT)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뿐 아니라 국회의사당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 사람들은 시리자에 자유재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리자가 무엇을 하는지 매일 옆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ERT는 2013년 6월 폐쇄된 이후 노동자들이 일부 시설을 점거하고

자체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다. 또 다른 ERT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좌파 정부가 들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ERT 운영을 재개하고 우리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좌파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줄타기

해고에 맞서 거의 2년 동안 투쟁하고 있는 재무부 청소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치프라스는 우리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리자 당사료 쳐들여갈

것입니다.”

시리자 정부는 오른쪽으로부터 지배계급과 연정 파트너 그리스 독립당의 압박,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압박을 받으며 줄타기를 하고 오락가락할 공간이 크다.

그리스와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새 정부를 길들이려 애쓸 뿐 아니라, 여차하면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본가들의 사보타주와 자본 해외 유출, 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는 1981~83년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후자

는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가 처한 운명이었다. 그리스 자체로도 1967~74년 군부독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스 노동자 운동이 시리자 정부에 기댄다면, 쉽사리 사기 저하돼 결정적인 순간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시리자를 권좌로 올려 놓은 힘, 즉 총파업, 거리 시위, 점거 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수적이다. 또, 이런 투쟁을 일으키고 더 전진시키는 데서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사진 출처 (소셜리스트 워커)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시리자 정부와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1월 25일 시리자 승리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은 경제 위기가 낳은 절망 속에서 이민자들을 속죄양 삼으며 성장했다. 2012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지역과 거리에서 폭력 활동을 부쩍 늘렸다. 그 와중에 2013년 9월 유명 힙합 가수가 파시스트에 살해됐고, 즉각 대규모 항의 운동이 터져나왔다.

전체 인구가 1천1백만 명 조금 못 되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인구 66만 5천 명)에서만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가 터져나왔다. 마침 예정돼 있던 공공

부문 총파업과 반파시즘 운동이 결합되는 것을 걱정한 당시 신민당 정부는 황금새벽당의 중요 인물들을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반파시즘 운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데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가 가장 큰 구실을 했다.

황금새벽당

황금새벽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소폭 떨어진 것은(2012년 42만 6천 표에서 2015년 38만 8천 표로 약 4만 표 감소) 이런 강

력한 운동 덕분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 등 지도적 인물들이 수감돼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방한 것이다.

파시즘은 절망적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부활할 수 있다.

따라서 반파시즘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3월 21일로 예정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 출처 Athensinfo19an

2013년 1월 19일 아테네에서 열린 반파시즘 시위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의 성장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 안타르시아는 0.64퍼센트(3만 9천여 표)를 득표해 2012년 6월의 두 배가량으로 성장했다.

위낙 수치가 작아 안타르시아의 존재감은 사실 없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르시아가 공공연히 혁명을 주장한다는 점, 투표가 신민당과 시리자로 양극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안타르시아의 진정한 영향력은 선거 득표로만 측정할 수 없다.

안타르시아는 투쟁적 노동자 운동에 만만찮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노조 선거 면에서는 약 10퍼센트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투쟁 면에서는 더 크다. 안타르시아에 속해 있는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지도적 활동가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전술적으로 시리자에 투표하지만 시리자보다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10만 명 가량 된다”고 추산한다.

앞으로 더 첨예해질 그리스 정세에서 안타르시아와 SEK 같은 혁명적 좌파의 구실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철회하라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의 보복성 인사이동, 임금삭감 등에 맞서 다시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매출 하락”과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 엔화 약세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주변에 호텔들이 새로 들어서 경쟁이 심해지자 노동자 쥐어짜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실질임금 삭감), 연봉제를 확대하고, 오래 근무한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한다. “고환율로 방이 없어서 못 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 시도 쉬지 못하고 방을 돌아다니며 시트를 갈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며 일했습니다. 그때 회사는 파이가 커지면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떨어지고 회사 매출이 떨어지자 이제는 ‘인건비가 너무 높다’, ‘7개월 임금 줄 테니 나가라’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매출 하락”과 “적자”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측은 2012년 특1급 호텔로 승급되려고 빚을 내어 객실을 증축하고, 호텔 로비를 전면 개·보수하는 등 엄청난 시설 투자를 했다. 사측은 이것을 ‘적자’로 잡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지라고 한다.

브레이크

사측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서 세종호텔노조는 눈엣가시였다. 세종호텔노조는 2012년 38일 파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등의 약속을 받으며 사측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강력히 제동을 건 바 있다.

사측은 어떻게든 이 성과를 되돌리고, 세종호텔노조를 약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업에 참가하거나 도움을 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을 고용해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에 맞서 세종호텔노조도 2013년 초부터 매주 집회를 하면서 항의 행동을 이어 왔다.

사측은 올해 초 전·현직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7명(지난해 12월부터는 총 10명)을 강제로 인사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 파업을 이끌었던 김상진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그가 입사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인 웨이터로 발령을 냈다. 보복성 인사이동인 것이다.

현재 김상진 전 위원장은 보복성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김상진 전 위원장의 인사이동 거부를 지지하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비 2배 인상을 결의하는 등 노조 탄압에 맞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싸우기로 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소수 노조이지만 그동안 곳곳이 사측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노동자 투쟁에도 열의있게 동참해 왔다.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성지현

※ 매주 목요일 18시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에서 ‘원직복직 쟁취! 노조탄압 분쇄!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발행인: 김민식 편집인: 김민식 인쇄인: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제보: 02-777-2791 E-Mail: ws@wspaper.org



1월 24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범국민대회'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장호중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혁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미 예고한 증세 계획을 거둬들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좀처럼 듣기 힘들다는 박근혜의 “유감” 표현도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게 뻔한 상황에서도 재벌과 기업주 등 부자들의 이익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

다 보니 복지 공약을 대거 축소했고, 지난해 세금도 예상보다 10조 원가량 적게 걷혔다. 이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조삼모사다. 극히 일부에게만 추가 감면을 해주겠다고 한다. 3개월 분납 얘기에 노동자들은 ‘우리가 할부냐?’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집권 시절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당사자들이다. 정규직 ‘철밥통’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자유주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감스럽게도 진보진영과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차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심지어 증세의 기본 방향은 옳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컨대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형편

이 나은 노동자들의 세금이 오른 것을 두고 ‘고소득자 증세’라고 부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개별 가지에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전체 숲은 괜찮은 변화”라고 논평한다.

물론 소득세 증세로 일부 부유층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므로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노동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소득세를 인상하면 노동자들의 부담도 늘고, 소득세를 인하하면 부유층의 부담도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인상을 옹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를 사실상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사회주의자들은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안은 무엇일까?

직접세

직접세는 정부가 사람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에는 크게 세 가지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험료 — 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누진율이 적용된다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더 높아진다.

그러나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가장 소득이 많은 최상위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38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조차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과세표준) 소득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공공연히 탈세를 하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와 능력은 크게 부족하다. 이 재원은 삼성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고작 16억 원을 세금으로 냈을 뿐이다.

반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까지 소득의 1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던 노동자들의 상당수에게 24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임금은 몇 년째 거의 제자리인데도 말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임금노동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몫(노동소득분배율)은 60퍼센트밖에 안 된다.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몫이 더 낮아져 상위 20대 기업은 50퍼센트도 안 된다.

법인세는 기업에게서 거두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기만 하다면, 자

본주의 체제에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세금이다. 노동자들을 착취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자본가들에게서 직접 이윤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가장 큰 세원이기도 하다. 법인세율을 몇 퍼센트만 올려도 당장 수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나 전임 정부들은 계속 법인세를 인하해 왔다. 지금은 가장 큰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보다도 세율이 낮다.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기업 저축과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었을 뿐이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소득에 비례해 내도록 돼 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주들도 사회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대체로 이 비용만큼 임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게다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상한선이 있어서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득 7천8백 10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 4백8만 원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보험료는 각각 4백68만 원, 36만 7천2백 원)

간접세

간접세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담뱃세, 주세, 유류세 등)로 나뉜다. 이것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따라서 대체로 노동자들과 서민층에게 불리하고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간접세 비중이 절반이나 된다. 애당초 소득세를 조정 등으로 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970년대 말 이후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제를 고쳐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자본가들의 국제 기구는 몇십 년째 이런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복지국가들의 세제도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큼 좋은 사례로 언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요금에는 직접세 부분과 간접세 부분이 모두 있다. 그러나 직접세 부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직접세보다 더 약하고 간접세 부분의 역진성*은 더 크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은 간접세를 대폭 올리는 효과를 낸다.

요컨대 지배자들은 간접세를 늘리고 직접세를 줄이려 한다. 직접세도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 한다. 기업주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는다. 반면, 임금이 많은 적든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진정한 세제 개혁을 이루려면 **첫째,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둘째, 직접세의 누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셋째, 군사비 등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 넷째,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간접세를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의 직접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세금부터 올려서 복지를 늘리자는 진보진영 내 일부의 양보론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사실상 포기해 오히려 복지 확대를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업주들이 세금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물가를 통제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으로, 무상교육 같은 복지 정책은 강력한 물가 통제 효과도 있으므로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이를 쟁취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세금은 어디에 쓰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약 3백70조 원의 세금을 거둬 예정이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된다. 이런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조건 등을 위해서도 돈이 충분히 쓰여야 한다. 이는 ‘혈세낭비’가 아니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고 늘려야 하는 지출이다.

그러나 또 다른 큰 부분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데 사용된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은 이들의 이윤 획득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기업들의 토목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세금을 투자해 만든 공기업을 헐값에 넘겨 주기도 한다.

전쟁연습과 무기 수출, 주한미군 주둔에도 세금이 쓰인다. 검찰·경찰·국정

원·법원 등 폭력 기구들을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에도 사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큰 틀에서는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견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항목 중 하나만 없애자고 해도 둘 다 길길이 날뛰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에 관심 있는 척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개혁주의자들은 복지 지출을 늘리는데 더 관심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를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종종 딜레마에 빠진다. 정부가 기업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폭력적 국가 기구들도 필요하다고 여기다 보니 국방비 등에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세

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세금이 국방비와 기업 보조금으로 쓰이는 데 반대해 왔다. 그런 돈은 보건과 교육·연금·주택·빈곤 완화를 위한 보조금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데에도 쓰여야 한다.

정부는 세금을 어디에 쓸지 하는 용도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서 거둘지 하는 징세 대상과 방법도 정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유층에게서 거둘지 아니면 서민층에게서 거둘지, 기업주들에게서 거둘지, 노동자들에게서 거둘지 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다.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다.



역진성

소득이 적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누진성의 반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와 아랍의 반혁명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2011년 아랍 혁명이 틈을 희망의 불꽃은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그라진 듯 보인다. 미국이 또다시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집트에서 쫓겨났던 독재 정권은 전보다 더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부활했다. 2013년 8월 14일 하루에만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 명 이상이 살해됐고, 정치적 반대파 4만 명이 수감됐다.

하지만 서방 언론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의 부상이다. 아이시스는 폭력적이고 종파주의적인 지하드 단체로 2014년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했다. 아이시스는 미국인·영국인을 참수

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이슬람 종파를 공격하고, 같은 수니파라도 자신에게 적대적이면 학살을 서슴지 않는다.

이 글은 이처럼 잔인하고 종파주의적인 세력이 어떻게 이라크와 시리아에 들어서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이시스를 분석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도구들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아이시스가 기반을 잡을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슬람주의 운동 내 개량주의 경향이 아랍 혁명 이후 위기에 빠진 것은 아이시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분석 방법

1) 불균등·결합 발전 이론

지난 40년 동안 아랍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변화가 진행됐다. 수익성 좋은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됐는데, 많은 경우 집권당 관료의 친인척에게 불했었다. 공공부문은 수익성 위주로 재편됐고 서민층이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아랍 대중에게 재앙이었다. 그뿐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아랍 세계의 이미 높았던 불균등·결합 발전* 정도를 더한층 높였다. 즉, 오늘날 예전의 국가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와 결합돼 더 큰 긴장을 낳은 것이다.

오늘날 중동 사회의 '불균등' 발전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사례는 시리아 혁명이 전파되는 방식이다. 2011년 시리아 혁명은 신자유주의 변화 속에서 궁핍화된 대중이 고향을 떠나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변했다. 이 지역들은 이후 아이시스의 시리아 내 근거지가 된다.

국가들 사이에도 불균등 발전이 전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영향력이 커졌다.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 혁명과 시리아 혁명에 개입할 수 있었다.

'결합' 발전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관계와 신자유주의가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아랍 세계의 국가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었다.

한편, 아이시스는 군사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소수 정예군 군사 조직으로, 무슬림형제단과는 또 다르다. 아이시스는 완전히 종파적인 강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다른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들이 비록 왜곡된 형태로나마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아이시스의 정치에서는 그

종교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양 말한다. 여러 문제가 이슬람의 "천 년도 더 된 구원(舊怨)"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언제나 그런 관념의 물질적 토대를 추적한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25년 동안의 전쟁과 UN(사실상 미국의) 제재와 미군 점령으로 말미암아 종파주의자가 라날 물질적 토대가 생겨났다. 전기가 끊겼을 때 성직자들은 주민들에게 전력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정부와 언론이 있는 부족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돌봤다.

내전으로 나라가 황폐해진 이라크 같은 조건에서 개인들과 그 가족의 생존은 부족 지도자나 종파적 민병대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 덕분에, 서로 대립하는 계급들을 종교나 부족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기가 수월해졌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실전 속에서 계급적 연대와 의식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슬람주의를 분석할 때는 지도자와 평신도들의 관계, 종단과 종파, 분파 내부의 계급적 분할을 봐야 한다. 예컨대, 무슬림형제단 같은 대중적 이슬람주의 운동은 커다란 사회적 모순을 품고 있다. 많은 평신도들은 노동자 계급, 도시 빈민, 하층 중간계급 소속인데,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이해관계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한편, 아이시스는 군사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소수 정예군 군사 조직으로, 무슬림형제단과는 또 다르다. 아이시스는 완전히 종파적인 강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다른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들이 비록 왜곡된 형태로나마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아이시스의 정치에서는 그



아이시스, 절망의 산물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군

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아이시스를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3) 제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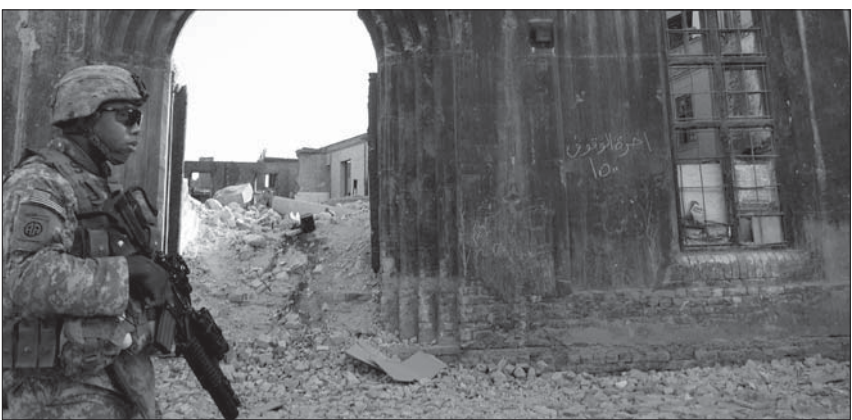
아이시스를 분석할 때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낳은 재앙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특히 이라크 점령에 군사적으로 실패하면서 그 패권이 약해졌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지역 강국의 상대적 지위가 높아졌다. 그뿐 아니라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를 향해 나아가거나 아이시스라는 새로운 세력이 불현듯 등장한 것과 같은 변화도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미국 제국주의가 개입 수준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아이시스의 명분을 강화하거나 아이시스를 대신할 다른 세력의 등장을 낳을 뿐이다. 게다가 제국주의의 중동과 평신도들의 관계, 종단과 종파, 분파 내부의 계급적 분할을 봐야 한다. 예컨대, 무슬림형제단 같은 대중적 이슬람주의 운동은 커다란 사회적 모순을 품고 있다. 많은 평신도들은 노동자 계급, 도시 빈민, 하층 중간계급 소속인데,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이해관계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4) 살아 있는 인간의 주체성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이지, 추상적 역사 법칙이나 객관적 조건이 아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위대한 점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 이론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론을 인간의 주체적 활동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아이시스가 아닌 대안을 고민하는 데서 중요하다.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군

종파주의를 키운 미국의 이라크 점령

미국은 2003년부터 이라크를 점령했다. 미국의 강점 하에서 이라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아이시스의 등장은 바로 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침공을 준비할 때부터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을 이간질하고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이라크를 다스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점령 후 미국은 종파와 부족의 인구 수에 따라 관직을 할당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종파와 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세력이 성장하기에 유리했다.

미국은 종파 간 경쟁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 종파 간 경쟁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 미국이 실시한 신자유주의 정책도 종파 간 경쟁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 미국은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토호, 민병대 지도자, 종파주의적 정당 지도자들이 큰 수혜를 입었다. 이들은 그전까지 국가에 속했던 기관들을 인수하거나 약탈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미국은 이 세력들을 통제하는 데 두고두고 애를 먹었다.

그러나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이런 흐름에 거들거름 저항했다. 미군 점령 초기부터 점령 반대 운동은 종파간 차이를 넘어 벌어졌다. 2004년 5월 미군 당국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라크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미군 철수를 바랐다. '수니파 도시' 팔루자뿐 아니라 '시아파 도시' 사드르시티와 나자프에서도 무장 저항이 잇따랐다. 2004년 4월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군 제2대대는 팔루자 저항 진압 작전에 반대해 항명하기도 했다.

2004년 11월 미국은 팔루자에서 수천 명을 학살했다. 팔루자 학살에는 저항세력이 종파를 넘어 단결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림수도 있었다. 팔루자 학살은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일어났고, 수니파 저항세력은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라크 미국과 손잡은 시아파 정당들은 마침내 '시아파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왔으며 선거 참여를 호소했다. 점령에 저항하는 시아파 일부는 선거 참여에 비판적이었지만 시아파 최고성직자가 '선거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점령을 끝내는 평화적인 길'이라

는 주장에 힘을 실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아파가 주도하는 종파적 정부가 들어선다.



이라크 총리 말리키와 손잡은 오바마 이 자들의 악행이 아이시스가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 버렸다.

이라크 알카에다의 성장과 미국의 또 다른 이간책

이처럼 시아파 일부가 미군 점령에 부역하기 시작하고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열하면서 알카에다 세력이 성장할 정치적 공간이 열렸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팔루자가 속한 서부 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전과(戰果)를 올리며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매우 종파적이었고 종파간 내전을 부추겼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종파적 규율을 강요하려 들면서, 그 명성은 곧 빛이 바랬다. 정부의 종파적 행태에 치를 떠는 많은 이라크인들은 똑 같은 종파적 보복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저항세력과 알카에다 사이의 틈을 노리고 이간질 책략을 부렸다. 일부

부족 지도자들과 협약을 맺어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고 알카에다에 맞서게 했다('각성 운동'). 대부분 수니파인 10만 명('이라크 아들들')에게 매달 3백 달러를 지급하면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우도록 했고, 향후 정식 군인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종파간 갈등 구도가 여전히 가운데 미국이 특정 종파로만 이뤄진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 범으로써 이라크의 분열은 더 악화됐다.

시아파 주도의 종파적인 이라크 정부는 미군이 수니파에게 무기를 쥐어 주는 것을 위협으로 여겼다. 2009년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아들들'을 강제해산하고 심지어 일부는 재판도 없이 처형해 버렸다. 종파 간 갈등은 더 악화됐다.

이라크 말리키 정권의 처참한 실패

한편, 미군에 협력하며 성장한 수니파 권력자들은 중앙 정부에도 일정한 지분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부를 이끄는 말리키는 이를 탐착치 않게 여겼다. 2010년 총선에서 말리키는 2위로 밀렸지만, 사법부 내 지지 기반을 이용해 스스로 총리를 연임하고 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자신과 경쟁하는 수니파 정치인들을 탄압했다. 자기 세력 구축을 위해 군대 통솔 체계도 재편했다. 그 과정에서 시아파와 민병대의 입지가 커졌고 종파적 폭력이 증가했다.

이처럼 종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말리키 정권에 대한 커다란 환멸이 곧바로 알카에다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수니파는 처음에는 테러가 아니라 대중 운동으로 정권에 도전했다. 이라크에서는 2012년 말부터 아랍 혁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리 시위와 광장 점거 운동이 벌어졌고, 여기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수니파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라크의 봄').

그러나 말리키 정권은 이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런 환경에서 알카에다가 다시금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아랍 세계 전역의 정세 변화도 알카에다의 성장을 도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영향력의 쇠퇴이다. 이라크 점령의 정치적·군사적 실패에 2008년 경제 위기도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더는 이라크에 돈을 쏟아부을 처지가 못 됐다. 그래서 미국은 2011년 이라크에서 철군하며 한동안 군사 개입을 꺼렸다.

2011년 아랍 혁명이 터져나온 이후 아랍 세계 전역에서 종파적 선전이 강화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걸프해 연안국들의 왕정들은 방송과 인터넷을 시아파 비난 내용으로 채웠다.

결국 아사드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이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이란·시리아와 앙숙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해 연안국들의 왕정들은 시리아 반군 중 종파주의적인 수니파 세력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애초 혁명을 주도했던 시리아의 기층 대중 운동과 무장단체들은 주변화됐다.

아이시스: 게릴라 군사 집단에서 국가로?

시리아는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양국 중앙정부가 약해지면 서 두 나라의 국경 구분이 무색해졌다. 2010년만 해도 거의 소멸한 듯이 보였던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이런 환경에서 불과 2년 만에 소생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오가며 세력을 키웠고 무기와 베테랑 전사들을 확충했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를 이끄는 알바그다디는 2013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및 세계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알바그다디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와 시리아 지부를 일방으로 통합한다고 선언한 것이 계기였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이름도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로 바꿨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의 봄' 시위대 50명을 학살한 게 알바그다디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이라크인들의 일부가 무장 투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말 이라크 말리키 정부가 수니파 정치인을 테러 혐의로 체포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팔루자 지

역에서 일어났다. 선거를 앞둔 말리키 정부는 시아파의 단결을 촉구하는 종파적 선동에 열을 올리며 팔루자 시위를 분쇄하겠다고 거듭 천명한다. 2004년의 학살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팔루자 지도자들은 아이시스와 손을 잡는다. 이로써 팔루자는 아이시스가 차지한 첫 이라크 도시가 됐다.

한편, 시리아 반군들은 2013년 3월 라까라는 도시를 차지했다. 라까는 반군이 차지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고 유일한 주도(州都)였다. 아이시스는 역량을 라까 장악에 집중했다. 수개월에 걸쳐 다른 반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끝에 아이시스는 2014년 1월 라까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이라크에서 제2도시 모술을 차지했다.

이처럼 빨리 성장한 결과, 아이시스는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이시스가 장악한 라까의 인구는 수십만 명이고 모술의 인구는 1백50만~2백만 명이다. 게릴라 군사 집단이 대도시를 통치하는 집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게다가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반혁명과 개량주의적 이슬람주의의 몰락

아이시스의 부상과 관련해 살펴볼 마지막 요인은 이슬람주의 운동 내 개량주의 경향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과 튀니지의 은나흐다 등 개량주의적 이슬람주의는 아랍 혁명 이후 선거로 집권했다. 그러나 집권 뒤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옛 지배계급의 압력 사이에 긴 신세가 됐다.

개량주의적 이슬람주의가 집권한 뒤에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계속되자 '정상적 사회 질서를 바르던 자본가 계급과 중간계급은 빠르게 실망했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그 정권들은 재앙으로 막을 내렸다. 이집트에서 엘 시시가 2013년 7월 대통령 무르시를 쫓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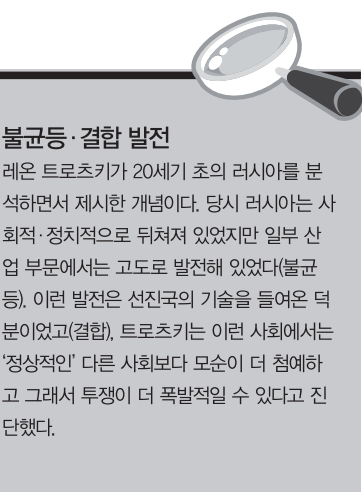
개량주의적 이슬람주의의 실패와 이라크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이시스는 더 광범한 잠재적 지원자층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아이시스는 아랍 혁명이 후퇴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됐지만 나름의 설명('민주주의는 서구의 악패일 뿐이고 이슬람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과, 좌절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시아파, 그리스도교, '불경한 여성' 등을 제공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이밖에도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유럽에서 갈수록 이 그 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혁명은 기존 세력들과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상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혁명의 분출은 결코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혁명을 터뜨린 것은 살아 있는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악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함께 투쟁하는 이집트 정교회 신자와 무슬림.

에겐 저항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하다. 아이시스가 그런 곳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2011년 혁명 이전의 아랍 세계와 이후의 아랍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혁명은 아랍 세계가 국가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면서 누락된 사회·정치적 긴장이 폭발한 것이었지만, 단지 그 전환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한 것, 즉 국가자본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이 글은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앤 알렉산더의 논문 'ISIS and counter-revolution: towards a Marxist analysis' (International Socialism 145)를 참고해 작성했다.



불균등·결합 발전

레온 트로츠키가 20세기 초의 러시아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정치적으로 뒤처져 있었지만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고도로 발전해 있었다(불균등). 이런 발전은 선진국의 기술들 들어온 덕분이었고(결합). 트로츠키는 이런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다른 사회보다 모순이 더 첨예하고 그래서 투쟁이 더 폭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집트·바레인·시리아에서 혁

8월 14일 하루에만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 명 이상이 살해됐고, 정치적 반대파 4만 명이 수감됐다.

아이시스는 미국인·영국인을 참수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게릴라전과 달리, 영토를 지키는 통상적 군대는 다양한 무기와 물자를 배치하고,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전술을 익혀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시스는 다른 시리아 반군이나 이라크군의 무기를 빼앗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자멸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이 큰 변수다.

많은 무장세력이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아이시스에 기댄다는 보도가 있다.

아이시스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이다.

대도시를 통치한다는 과제는 잠재적으로 아이시스에 커다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지배자처럼 아이시스는 주민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이시스의 특징인 잔혹 행위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어려움도 제기한다.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설

쌍용차 해고자 김정옥, 이창근 동지의 굴뚝 농성이 47일째 되던 1월 28일,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쌍용차 평택 공장을 찾았다. 유난히 바람이 찬 이날도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은 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정문 앞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한 시간 남짓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2009년 뜨거웠던 점거파업, 줄 이은 비극적 죽음들, 희망텐트와 고공 농성, 무급휴직자 복귀까지 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다 문득 출근길 노동자들의 사뭇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출입구 앞에서 “힘내라! 김정옥, 이창근” 팻말을 든 해고자에게 격려의 눈인사를 건넸다. 일부는 건너편에 있던 해고자들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멀리서 손을 들어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1~2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노동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사측의 눈치를 보며, 때로 ‘산 자’와 ‘죽은 자’가 충돌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해고자들의 눈길을 피했었다. 지난 1년 넘게 공장 안 동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지지를 호소한 해고자들의 노력이 변화를 만든 것이다.

출근 투쟁이 끝나고 바로 옆 쌍용차 지부 사무실로 향했다. 난로 옆에서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해고자가 이날 뿌려진 사측의 유인물을 들고 문제 있는 대목을 하나하나 꼬집어 줬다.

“이것 좀 봐. ‘8·6 합의서 정신’에 따라 교섭을 하겠다잖아.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라니까.”

정말이지, 그것은 사측의 교섭 방향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했다. 6년 만의 첫 실무교섭을 하루 앞두고 나온 사측 유인물에는 “3자 대화, 8·6 노사합의서 정신에 입각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8·6 합의는 2009년 점거파업 말미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로, 향후 신규인력 필요 시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고자 복직은 명시하지 않았다.

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이어진 노동자연대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언론들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 마치 해고자 문제가 다 끝날 것처럼 떠들썩한데,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측은 신차 티볼리 판매를 확대하려고 해고자들과 대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질질 끌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할 것이란 얘기였다.

갈라치기

“우리는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비정규직 포함 1백87명 복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측은 전원 일괄 복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벌써 8·6 합의를 들고 나온 걸 봐요. 사측은 계속 희망퇴직자들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그중에서도 애초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들을 선호할 수 있어요.

“올 6월에 티볼리 디젤이, 10월에 티볼리 롱이 출시돼요. 신규 인력이 필요



공장 앞에서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해고 노동자들.

한 게 사실이지요. 이런 때 해고자들을 무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 받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비율을 정해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려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겁니다.”

손배가압류나 사망자 26명에 대한 피해 보상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 때문에 양 실장은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섭 국면이 열리면서 생활전선에 나섰던 해고자들이 속속 지부로 모여들고 있다. 1월 24일에는 오랜만에 해고자 1백3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양 실장은 “이런 힘이 모여야 교섭에서도 사측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정리해고 무효 소송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변호인단도 확대했다. 8·6 합의가 있는 한, 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려면 법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서다.

양 실장은 조심스럽게 국민모임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 지형”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의 반영일 것이다.

실제 사측이나 정치권을 압박하려면, 무엇보다 투쟁의 힘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해고자들도 민주노총의 한상균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해 보였다. “올해는 민주노총이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쌍용차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공장 안의 변화

쌍용차지부는 공장 안에서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한동안 공장에 소홀했어요.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공장 앞으로 거점을 옮긴 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으니, 여기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매일같이 출근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원망도 하고 서먹함도 있었죠. 무급휴직자들이 들어갈 때

도 몇몇 동지들은 ‘싸움은 우리가 했는데’ 하면서 서운해 했지만, 지부는 그 동지들의 복귀를 축하했어요. 사실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복직돼야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우리만 살자고 할 수는 없어요. 쌍용차 투쟁은 우리만의 싸움도 아니고,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구조조정의 피해자입니다. 정리해고는 피했지만, 노동강도가 너무 세졌거든요.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하니까요. 공장 안에서도 3명이나 자살했죠.”

그런데도 수년째 무정의, 노사화합 선언 등에 골몰하는 기업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있다.

“2주 전인가, 공장 안에서 기업노조 위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뼈라가 뿌려졌어요. 사측에 돈을 받고 황제 골프에, 명품에… 온갖 특혜를 누린 거죠. 기업노조 위원장이 올해 선거에 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코너로 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파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실장은 좀 더 긴 안목에서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에 대비해 공기업화 등의 대안을 주장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순차적으로라도 해고자들이 복직한다 해도, 마힌드라가 또 상하이 차처럼 먹고 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상하이차도 4년 만에 먹튀 했잖아요. 마힌드라도 티볼리 판매가 줄면 급세 손을 뻗 수 있어요. 이런 때 당하지 않으려면, 공기업화나 사회적 기업 같은 대안도 준비해야 해요.”

우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김정옥, 이창근 동지가 있는 굴뚝 옆 남문으로 이동했다. 굴뚝 가장 가까운 공장 담벼락 옆에 작은 트럭으로 만든 농성장이 있었다. 해고자들이 두 명씩 돌아가며 이

곳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세요?” 이창근 동지와 영상 통화가 닿았다. “여보세요? 어, 어 잠깐만!” 이창근 동지는 서둘러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쌍용차 범국민대회 영상에서도 보여 줬던 말끔한 고공농성자 이미지 그대로였다. “아니, 내가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못 감아서 빗어 줘야 한다니까.”

보병전

얘기하는 내내 이창근 동지는 밝았다. 춥고 좁은 곳에서 농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굴뚝 위 동지들은 결연해 보였고 여유도 느껴졌다. “교섭이 시작됐지만 금방 안 끝날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해결을 봐야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죠. 우리 몸이 무기라는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창근 동지는 연대 투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공중전을 하는 거고, SNS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보병들이예요. 진보진영이 할 역할이 거기 있다고 봐요. 보병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는 아래서 싸우는 해고자들이 투쟁을 지속할 수 있게 응원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정옥 동지는 공장 안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굴뚝 아래에 들렀다 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동료들이 힘내라고 문자도 보내 줍니다. 이런 지지가 없으면, 우리가 공장 안 굴뚝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 연대 단체들의 힘으로 우리 투쟁이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그 힘으로 버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모아 주세요.”



“연대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50일 넘게 굴뚝 농성 중인 김정옥·이창근 동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관련 투쟁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3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예열" 시기를 거쳐, "전 지부 비상태세 돌입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올해 1월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65.8퍼센트가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37.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만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에 발맞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삭감, 통제 강화, 성과연봉제 확대, 조직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파업 시점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번 지부장단 수련회에서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 이왕 할 거면 승리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는 4월 28~29일 찬반투표를 하고 5월 1일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 속에 구체적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 속도를 보면 5월 1일 파업은 늦은 감이 있다. 이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악안이 나올 시점이다. 이미 여야 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뜻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보기에 개악을 막기에는

늦었다고 (그래서 승리 전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금 개악을 저지하려면 여야가 개악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파업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파업이 진정 실질적이 되면 정부 여당이 아무리 막아파일지라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마침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맞서 4월 중순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공무원노조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충재 위원장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노조 파업이 "총연맹 파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기를 맞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운다면 조합원들이 위축감을 덜어내고 투쟁에 동참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요구들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양산 반대 등 — 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지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면, '정규직 이기주의'나 '철밥통 지키기'나 하는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최근에 4월 연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점들로 판단해 보건대, **민주노총과 함께 4월 중순에 파업하는 것이 투쟁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중순 파업을 결정해 투쟁의 '끝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민주노총의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시기를 맞춰 함께 싸운다면,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더 높일 수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한편에서는 '총파업' 카드를,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투 트랙'을 주장한다. 대타협기구를 활용해 개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없이도 특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공투본이 대타협기구 운영 동안 '특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는 특위대로 여론 수렴,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한다.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을 특위에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이 [냐?]"는 질문에 "지금 상정 안 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정

부안을 내놓고 노조는 노조안을 내놓고 당사자 협의를 하라"고도 했다. 국회특위의 야당 측 간사 강기정은 공무원들이 연금 개악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당사자들을 대타협기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팬드는 척하면서 양보교섭의 테이블로 유인해 간 것이다.

이것이 대타협기구의 진정한 본질이다. 논의 과정이 어떻든, 여야 의원들의 말이 무엇이든 대타협기구가 개악을 위한 양보 교섭 테이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타협기구 적극 활용론을 주장해 온 이충재 위원장조차 3월에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3월 28일이면 대타협기구 활

동이 종료된다. 그때까지 테이블에 앉아 적들과 입씨름하지 말고 지금 나와 4월 파업을 건설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양보할 의사가 없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운동이 공무원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 집회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한다. 정부·여당조차 노동자들의 분노가 대중 집회를 넘어 파업 같은 더 위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맞서 파업을 벌이겠다는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파업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정부는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수의 어린이집(특히 민간 어린

이집)이 학부모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모와 교사가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어린이집 내부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CCTV 같은 증거라도 없으면 피해만 당할 뿐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심정은 공감이가 간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는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인천의 해당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가해 교사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도 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CTV가 사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 강화도 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 2013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17개월 된 아이의 등을 온통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정부는 처벌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2013년 2백32건에서 2014년 2백73건으로 15퍼센트 증가했다.

책임 회피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는 오히려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가되기 쉽다.

진정한 대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의 민주적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대부분 별도의 식사시간이 없다. 점심 때가 되면 아이들을 만

저 챙겨 주고 자투리 시간에 자신의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청소와 교재 준비 등으로 하루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아이들을 차분히 달래고 친절하게 지도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육교사 1명이 많게는 어린이 20명을 돌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반면 보육교사의 급여는 매우 열악하다. 10년차 보육교사의 월급이 1백 5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 '국가 책임 보육, 안심 보육'을 약속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보육 재정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가정양육비를 인상하고,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제 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뉘서리를 맞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양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은 불가피하게 취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한 것인데, 그 책임을 다시 여성들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니 전업주부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만들어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진희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 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데서 보듯, CCTV 설치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교사들을 속죄양 삼으며 부실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다고 문제 삼는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아동 학대 발생의 핵심 요인**이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다. 휴식시간은 하루 17분에 불과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의 숫자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장시간 근무에 노동강도도 높지만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백44만 3천6백77원에 그쳤다.

자금심

이렇게 열악한 조건 때문에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2012년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속연수는 겨우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의 평균근속년수도 3년 2개월에 그쳤다.

고된 장시간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낮은 지위로 보육교사가 자금심을 갖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해온 정부가 보육교사의 자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부 대책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규직인 담임교사 확충계획 없이 비정규직인 보조교사·대체교사 배치 계획만 제시됐다. 이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한 해 2천억~3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성의 일자리와 삶 개선을 위해 질 좋은 공공보육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우파들은 아동 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 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공방이 커지자 기업주들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대책으로 실시됐지만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출산율을 높여 그 혜택은 입고 싶지만 재원 부담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주·부자 증세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미 무상보육 확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박근혜는 재정난 해법으로 아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시사해 시

도 교육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교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예산을 충당하는 일이 생길 판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여성 고용 정책의 일환**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에서 취업모에게 우선권을 주고 특히 미취업모가 0~2세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육아휴직 미비, 장시간 노동구조와 관행은 놔두고 여성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을 이간질하고, 0~2세 영아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등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퍼뜨리고 있다.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규제 완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시장화 정책으로 질 낮은 민간 어린이집이 대거 생겨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4곳을 민간이 운영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시설이 열악하고 교사들의 처우도 국공립보다 더 나쁘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원장이 급식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쉽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겨우 5.1퍼센트에 불과하다.(아동 수 대비 수치는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게다가 이조차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무늬만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높은 민간 어린이집 비중과 국·공

립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양질의 보육기관 부족의 핵심 원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자기 계획인 양 슬쩍 끼워 넣어 생색을 내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려 한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은 민간 어린이집의 부정·비리와 부실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돼도 민간 기관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평가인증제는 형식적이다.

민간 기관들이 주도해 경쟁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인건비 절감 압력은 서비스 질 개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부 민간 어린이집을 선별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낳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부자집 아이들의 쾌적한 어린이집과 서민층 아이들의 누추한 어린이집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본가 정치인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부르짖더니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국회 어린이집을

지를 때는 국고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국회 어린이집 3곳을 짓는 데 72억 원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국회 어린이집은 시설만 좋은 게 아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가 1인당 3~6명에 불과하다. 이수치는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1인당 12~14명) 이하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1인당 10명)보다도 더 낮다.

CCTV 설치 의무화 따위로 보육서비스 위기의 본질을 호도할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 어린이집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육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자치단체의 시설 직접 운영·보육교사 직고용 등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평등과 모든 아이들의 전면적 발달에 필수적이다.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보육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따른 정부와 친사용자 언론들의 이간질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이룰 것을 주장해야 한다.